

“섬진강 수해, 댐 관리 실패한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전남도 자체 피해 원인 분석

지방하천 국가 일괄정비 등

수해 재발 방지 특단 대책 함께

환경부·환경조정위에 건의키로

전남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 피해와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체 분석한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조절용량은 3천만 톤/s(총저수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이고 ▲'댐관리규정'을 12회 개정하면서 홍수조절량 추가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또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방류를 미이행해, 일시 초과 방류한 것을 비롯한 댐 운영 미흡 등으로 홍수 조절 실패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 시 하루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을 확대 설계(4.15배 증가)함으로써 댐-하천 통합관리 실패 등

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처럼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근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수용하고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구를 위한 신속한 보상 등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댐과 하천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일괄정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 유역환경정비 시설로 홍수관리 강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에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송해진 전북지사와 공동으로 섬진

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담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수해원인 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 7월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섬진강댐 하루 대규모 수해 원인을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로 진단하면서도 피해 원인 주체를 밝혀내지 못해 책임 회피성 '행방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간접적'이나 '한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 홍수 피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중간보고서보다 못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곡성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내고 홍수피해 평가액 전액을 올해 안에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피해 주민 1266명이 청구한 금액은 790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분쟁조정 건은 이미 환경부가 실시한 홍수피해 원인 및 현황조사 용역 결과가 있고 손해사정 평가사를 통한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확정돼 있다"며 "환경분쟁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에 피해 보상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 평가사가 산정한 피해액은 피해주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피해액 전액을 반영해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7~8일 섬진강 일대에 400~50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넘쳐 구례·곡성, 남원, 경남 하동 등 하류지역에서 2147가구 4382명이 163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북 평생학습인 이재명 지지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평생교육을 받는 학생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낙연 의원직 사퇴건' 처리 않기로...경선 후유증 우려

당 지도부, 정치적 행동 판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힌 가운데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9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결연함은 이해하지만, 실제 처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건과 이 전 대표 사직 안건을 같이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 "두 사안은 다르다"면서 "윤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따른 것이고 이 전 대표 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사퇴서가 처리될 경우 민주당 의석수는 현 170석에서 169석으로 줄어든다.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해야 의결)로 처리된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민주당 의석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퇴서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 사직 안건을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이낙연 의원실에서 사무실을 비우며 내놓은 책자와 서류더미 등을 국회 직원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처리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이 전 대표의 사직 선언을 선거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퇴 선언 자체로 효과를 본 상황에서 실제 사퇴 안건 처리에 나설 경우 연세 행동을 유발하면서 당내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실제 당장 이낙연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도 동반 사퇴 의사를 피력했다가 주변의 만류에 뜻을 접었

다. 나아가 대선 후보 중 현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두관 박용진 의원 등의 직 위주 문제도 경선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당에서는 이번 의원직 사퇴 파동으로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 당이 원팀으로 본선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될 경우 나중에 누가 후보가 되든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27%·윤석열 24.2%·홍준표 15.6%

리얼미터 조사...이낙연 13.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서고 양자 대결구도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우위를 보인 다자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19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직전 조사인 8월 4주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했다. 반면 윤 전 총장은 직전 조사보다 2.3%포인트 빠진 24.2%로 나타나며 2위로 내려앉았다. 이 지사와의 차이는 2.8%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7.5%포인트 큰 폭으로 상승한 15.6%를 기록, 3위로 치고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보다 0.9%포인트 상승한 13.7%였다.

대선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 리얼미터가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는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고 묻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9.6%, 이 지사는 38%를 받았다. 윤

전 총장은 이 전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39.9%를 받으며 이 전 대표(34.6%)를 제쳤다.

홍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37.4%, 홍 의원이 33.4%의 지지율을 얻으며 이 지사가 우위를 점했다.이 전 대표 역시 양자 대결에서 36.2%를 기록하며 홍 의원(33.3%)을 앞섰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엠베레인퍼블릭-케이스탬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9월 2주차 전국표조사에 따르면, 차기대선 적합도 조사에서 이 지사 25%, 윤 전 총장 17%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13%, 이 전 대표는 12%를 각각 기록했다. 내주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호남에선 이 지사 35%, 이 전 대표 2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응답률 28.0%)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당정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최대한 수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말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늘릴 계획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도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예산 초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계할 때도 딱 88%에 맞춰놓은 게 아니라 약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조금 더 상황,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프로세스가 제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며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를 설계해 9월까지의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면 10월 말부터 지급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예 능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원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에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